

##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정책 모색 : 한일 소비자 위해정보 분석을 중심으로

박 배 진(건국대 강사)

소비자안전정책의 중요성은 현재 우리사회에 있어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어느 때 보다 효율성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FTA 확대와 함께 광우병 소에 대한 논란과, 중국산 식품, 공산품의 수입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글로벌 사회에서 소비자안전 문제는 국제적인 대응 뿐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의 의미로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 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다차원적 정책모색의 취지하에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정책의 현황과 일본의 정책 시스템을 비교 분석 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실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일본의 자세를 비교하는 언론의 보도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연구의 내용과 같이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을 비롯한 제품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주도의 각종 다양한 제도 시스템의 관리가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와 관리의 측면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강조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더욱이 내부고발자제도 등을 제도화하여 시장지향적인 소비자안전정책을 유도하고, 국내산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식품분야에 있어서의 트래서빌리티의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한 정보공유를 현실화 하는데 앞장서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연구로서 이 같은 일본의 정책사례는 우리의 현실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단지, 본 연구에서 다룬 소비자안전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시점을 명확히 하여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한국과 일본의 정책 제도의 비교를 보다 구체화하여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제도 시스템에 있어서의 감독 평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시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위해정보 시스템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소비자위해정보 분석과 앞서 제시한 정책적인 비교와는 내용의 관계성이 모호하다. 위해정보에 대한 분석을 미리 제시하여 소비자안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간의 위해정보수집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서의 비교와 이에 대한 평가와 활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고찰도 요구된다.

덧붙여, 소비자안전정책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방안이다. 소비자안전정보를 사업자가 스스로 공개하는 한편으로 소비자는 이를 적극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과 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교육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정부, 기업, 소비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